

다산포럼

김민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어느 대표적인 기업인이 우리 정치가 삼류(三流)라고 했다. 그가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자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정치가 삼류를 면하려면 두 가지 치명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첫째는 상계(常軌)를 벗어난 이념 지향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파와 좌파가 길항(拮抗)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어느 일파가 장기집권을 하는 것보다는 번갈아가며 정권을 맡아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우파와 좌파는 시대착오적인 이념 지향성에 집착하고 있다.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참칭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한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 대한 항수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선거에 임했지만 집권 이후 공권력 강화를 기반으로 재벌만 바라보며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고 일방통행을 일삼다가 파탄지경에 빠졌다.

좌파는 아직도 80년대의 반체제 변혁논리를 청산하지 못한 것 같다. N.I.이건 PD 건 군부 장기집권 하에서 전개된 한국자본주의의 맹점을 이해하는 하나의 유용한 분석틀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

누가 새 시대를 열고 있는가

외적으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대내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80년대의 분석틀은 유용성을 상실한 것 오래다.

좌우파의 시대착오적인 이념 지향성은 끝없는 대립과 갈등, 분열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물론 여야 정치인 가운데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 반갑지만, 결정적인 국면에서는 좌우의 원리주의 강경파들이 국면을 주도하며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만다. 안타까운 일이다.

둘째는 지역정당체제를 허물어야 한다. 여야 정당이 다 같이 전국정당을 지향한다고 말은 하지만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노력을 보인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되레 지역주의에 기대어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한 것 같다.

인사나 지역개발에 타지역을 배려하는 종조만 정착해도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될 터인데, 이 정권 들어서도 '영포화'나 '형님 예산'이니 하는 말만 무성하니 가슴이 답답할 노릇이다.

노릇맞춰 버는 얼음장 밀리로 오는

것일까? 최근 들어 시대착오적인 이념 지향성과 지역정당체제에 충격을 가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 대한 높은 지지도도 그렇고, 무당파 박원순 후보가 서울 시장에 여우 있게 당선된 일도 그렇다. 여론에서 이석연 변호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려 한 것이나 서울대 박세일 교수 아내에 청담을 타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신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올바른 말하자면 새 시대를 여

는 사람들은 안철수나 박원순, 또는 이석연이나 박세일이 아니다. 다름 아닌 20·30·40의 무당파 유권자들이 앞장서서 시대착오적인 이념 지향성이나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허무는 지난한 일을 해내고 있다. 안철수 박원순이나 이석연 박세일은 그런 도도한 흐름을 먼저 감지해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을 따름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사라질지 모르는 전망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여론에서도 한 나라당 가지고는 총선을 치를 수 없어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적지 않은 모양이다.

두 당의 명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짧은 무당파 유권자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조선일보 강찬서 주필의 표현대로 "변 옛적에 사라진 시발택시마냥 고물(古物)로 달리는 낡은 시대감각"을 내던지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말해 이념적 오류나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가치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느 당이건 미구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껍데기만 남은 사실상의 식물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단지는 자는 없고, 집착하는 자는 잃는다. 시대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고려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이웃주민들이 '장애여성' 성폭행하다니

장흥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 수십명이 지적장애 여성 한 명을 수년간 성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피해여성을 보살펴온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100명 이상이 연루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A(21)씨를 성폭행해 사법처리된 주민들은 현재까지 3명에 이른다. 이모(58)씨는 구속 기소, 윤모(71)·위모(77)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 오모(58)씨는 올 초 징역 3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은 추가로 10여명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펴고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가해자가 늘어날 개연성은 크다. 피해 여성이 7~8년 전부터 성폭행을 당한다던지 연루자들이 서로 '암묵적 약속'으로 공유해왔으며,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왔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지목한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가해자들은 정신연령이 7세 정도인 피해자가 겁이 많고, 군것질을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해 폭행을 가하거나 과자 등으로 유인한 뒤 컨테이너나 축사 등지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니 이런 인면수심(人面獸心)이 어디에 있는가. 구속된 이모씨는 피해자와 친척간이며, 윤모·위모씨 등은 70대 노령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주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야 하며, 용의자들에게 선의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 여성이 가족, 마을 사람들이 입는 선의의 피해를 고려,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또 이번 사건은 우리 농촌이 장애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 등 관계당국은 이들이 보호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시설 마련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광주시 주요 사업 잇단 비리 의혹 왜 이러나

광주시의 공신력이 날개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 입찰과정에 비리의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게다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가 없다는 시의 판단을 뒤집는 법원 판결과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자체 검증시스템도 허점이 드러나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게 47억 원 규모의 CC(폐쇄회로)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다. 광주지법은 이 사업 입찰절차의 불공정 시비와 관련, 탈락한 KT가 최근 광주시를 상대로 낸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8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가 SKT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사례가 있었다"며 계약체결 등을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KT의 이의 제기, 시는 자체 감사를 벌여 "적법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반대로 뒤집혔다는 점이다. 행정의 투명성에 큰

오점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사업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982억 원 규모 총인처리시설 시공사 선정의 후폭풍도 거세다. 이 사업 관련 공무원의 금품 요구 녹취록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판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도 비리 첩보가 입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는 조합장 개인 문제여서 별 탈이 없을 걸로 보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에 큰 오점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사업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982억 원 규모 총인처리시설 시공사 선정의 후폭풍도 거세다. 이 사업 관련 공무원의 금품 요구 녹취록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판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도 비리 첩보가 입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는 조합장 개인 문제여서 별 탈이 없을 걸로 보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에 큰 오점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사업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無 等 鼓

'아반의 시대', 거리에는 하루 걸러 눈물이 떨어졌다. 숨막히는 군부독재에도 민초들은 광주, 서울, 부산에서 함성을 멈추지 않았다. 목이 터져라 민주화 구호를 외치던 시위대는 실심 굶어 죽어갔던 때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얇은 비닐로 눈을 가리고, 뱀새를 막아 속 배는 최루탄에 맞서기엔 역부족이었다. 보기에도 섬뜩한 검은색 페퍼포그 차량 폭대기에서 발사되는 "지랄탄"은 "쉬쉬" 기본 나쁜 소리를 내며 땅바닥 사방팔방을 휘젓고 다녔다. 최루탄을 발사할 때는 고

용했다. 유해성 논란도 불렀다. 이처럼 집회·시위대 해산에 동원됐던 CS최루액이 사라진다는 소식이다. 경찰은 시위진압 때 상대적으로 인체에 덜 해로운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파바(PAVA) 최루액과 캡사이신 근접 분사기로 대체키로 했다. CS최루액은 정해진 사용량을 준수하면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다는 주장

도 있지만 경찰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아예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올해 8월까지 파바 5880L, 2억 7000만원어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연 캡사이신 성분의 근접 분사기를 도입해 시위대 해산 장비로 활용하고 있다.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최루액의 퇴출과 함께 '아반'도 물러간 듯 보인다. 그러나 어느 사퇴된 시위단 존재할 것이냐, 상황에 따라 강제진압도 배제할 수 없어 최루탄이 거리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NGO 칼럼



고현주

공익이사제가 급조된 법안이라고?

성폭행조사 등 14명은 형사 입건되고, 광주시는 인화학교 법인의 재산 증여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대로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우석법원 인가취소'를 사회복지 사상 처음으로 이뤄냈다. 6년 5개월(377일간의 천막농성 포함) 만에 이끌어낸 성과다.

인화학교 사태 마무리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인 시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인권침해를 가능케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구조적 문제해결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5일 도가니문제해결과 사복법개정을 위한 전국 힘 모으기 대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 토론회 자료로 참석한 사례를 들어 발언했다. 발제자 김종필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이

사회의회 전문위원은 "영화 '도가니'로 인해 당장 여론만의 의식해 두 달 만에 발의된 의원들의 법 개정안은 책임감 없는 모습이며 사회복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공익이사제도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를 냈고, 이에 박 상임공동대표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복법 개정은 이미 십여 년 전 예바다 사태 때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이라고 역설했다고 한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사복법이 상정되었기에 이제는 국회 사복법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에 주목할 때"라면서 "18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기

에 지속적인 상징과 논의가 진행되고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삶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 사법점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고 탈시설 자립생활의 지름길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다.

두 번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 된 채 시설에서 12년째 지내오시다가 (사)실로암사람들 여성장애인 자립주택지원사업을 접하게 되었고, 현재 금호동 자립주택에서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자립생활을 하고 계시는 김영삼님이 첫 시장 구경 후 소감을 밝히셨던 것이 기억난다.

"물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구경하고 생산배세, 과일 배세 등 배세가 달라. 사는 느낌이 나네"

시설거주자의 인권강화를 위해 권리옹호제도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힘을 모아 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로암사람들 주거복지팀

기고



설문식

여수박람회 기업 후원을 이끌어 내려면

에 대한 우려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들은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애초 후원목표와 비교하면 아직 실적이 못미치니 적자가 될 수도 있겠다고 애정 어린 지적을 한다.

하지만, 박람회 전체 비용에서 5%에 못 미치는 후원을 놓고 '적자 박람회'를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겁이 없지 않다. 하지만, 기왕 논의된 차에 이에 대한 이해와 지역민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우선 여수세계박람회의 후원 목표는 410억원이다. 2008년 박람회 기본계획을 마련하던 때에 달라진 글로벌 경제위기 같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0년 2월 재정부과 협의 하에 확정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후원 실적은 527억원으로 목표 대비 128%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만 현대·기아차 등 총 15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박람회 개막이 가까워지면서 후원 참여도 본격화되는 추세다. 조직위는 후원 목표액을 달성했지만, 앞으로 국내의 기업들 상대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후원과 달리 더 큰 성과는 박람회 기간 중에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포스코 등 국내 7대 대기업이 모두 독립기업관을 설치하고 전시경쟁을 한다는 점이다. 기업마다 수백여원을 투입하는 독립기업관은 기업에게 홍보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박람회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박람회 유치 당시 민간기업의 전시 참여는 제한적으로 기획했었다. 추가로 1000~2000억원 규모의 유치 효과를 거둔 대기업들의 독립기업관 참여는 후원 못지않게 박람회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일찌감치 확정된 민자 시설들도 이미 의

관을 갖추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LH공사 사가 시행하는 종사자 숙박시설인 엑스포타운, 대형레저산업이 건설하여 남해안의 랜드마크가 될 VIP용 숙박시설 엠블호텔, 한화건설이 대표로 참여하여 운영하게 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까지, 여수세계박람회는 정부가 주관하고, 각 국가가 참여하는 행사이지만, 이처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에 그 성공적인 개최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최근 한 민간연구원은 지자체의 민자 유치 성공요인으로 과격적인 인센티브, 지도자의 리더십,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 등 세 가지 요소를 꼽았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스스로 행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공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분위기가 개인에서 조직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될 때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과 함께 기업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마케팅본부장)

즉 당장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등록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반환보다 복학 후를 위해 그냥 이월시키는 게 더 나은 학생도 있을 것이다. 사정이 서로 다른

데 대학마다 선택권을 주지 않고 무작정 한 가지만 강요하는 것은 상이탑의 진정한 모습인 아니다.

▲이동현·광주시 남구 덕남동

대학 휴학때 등록금 반환·이월 선택권 줘야

대학에 다니고 있는 동생이 집안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번에 잠시 휴학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미 낸 등록금이 격정돼 고민하던 중 예전에 휴학을 해본 경험이 있는 다른 친구에게 물었더니 등록금이 계속 오를 테니 돌려받지 말고, 복학할 때 따로 내지 않도록 이월하고 싶다고 알려줬다.

나도 그게 나을듯해서 동생더러 교수처를 찾아가 "이월하겠다."라고 말하라고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그렇게는 안되며, 반환만 가능하다."라며 돈을 받아가려는 게 아닌지, 그것은 나중에 학비가 오르면 모든 금액을 다 받기 위해 그러는 것이었다.

다른 대학에 알아보니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미리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이나 이월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예전에 80,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들은 학생이 휴학할 경우 지금과 같은 반대로 이미 낸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 돈의 이자수익을 위해 학교 측에 유리한 방식을 택한 것이다.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쪽만 강요할 게 아니라 이월이든 반환이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규정을 바꿔줘야 한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範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2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외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어문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3
대외FAX	222-4918	사진부	2200-697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외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